

플랫폼 자사우대 감시 강화… 메타버스·NFT도 집중 점검

공정위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가능성
 신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보호 강화
 숙박업·골프장 등 불공정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업 등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피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경쟁 플랫폼 거래 방해) 등 플랫폼사업자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안과제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

요증가가 예상되는 OTA(온라인여행 중개업체),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숙박업소나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과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

비자 이의 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 계종사자 대상의 리베이트 제공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지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외국국적의 동일인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즉시 이와 관련 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보고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동일인 정의나 요건 규정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인 조항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이라며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

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추가계열 사들이 있는지,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봤으면서도 외국인인 점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도를 고칠 경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아울러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 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쟁 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작년 13.1억달러… 누적 200억달러
 의약·신소재·리조트 분야 큰 폭↑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누적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최근 3년 이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억 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FDI는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 분야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세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상으로는 그린필드형 투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중화권·필리핀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사업장 신·증축과 고용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억 8000만달러로 전체 실적의 98%를 기록했는데, 국내 전체 외투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이 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해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투자 비중은 유럽연합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다. 유럽연합은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 전자, 필리핀은 리조트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중화권·북미 공통적으로 의약·바이오 분야 투자가 인천으로 중점 유입돼 글로벌 바이오 생산거점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인천(7.1억달러), 부산진해(2.9억달러), 동해안권(1.0억 달러), 경기(0.9억달러), 광양만권(0.8억달러), 충북(0.2억달러), 대구경북(0.1억달러) 순이며, 2020년 신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百·마트,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
 정부, 업계 부담 완화 총력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 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요 백화점과 대

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며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에 업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정취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16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

뤄진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위장된 '가짜표적', 초분광으로 잡아낸다

국과연, 초분광 영상기반 기술 개발

디코이(decoy)처럼 잘 위장된 가짜 표적도 멀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일 물체 고유의 분광(分光) 정보를 활용한 항공 정찰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반사특성을 이용해 분광신호로 자동식별하게 하는 최첨단 전자광학 기술이다.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사용하면 적이 아군을 속일 목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주요 군사장비를 본떠 만든 디코이(유인용 모형)와 실제 군용장비를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아군 장비에 대한 오인 폭격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항공정찰기 등에 장착이 되면 표적식별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DD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DD는



기만 위장체 디코이.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짜장비로, 기술력의 발전으로 레이더탐지에도 진짜와 비슷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문형철 기자

이번 기술을 항공정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해 내구성 점검을 위한 환경시험 등을 실시했고, 항공 활영 시험을 포함한 기능·성능시험 등 개발시험평가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ADD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군 사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이 국산 감시정찰체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존 정찰체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표적식별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m@

'지하수댐' 늘려 보길도 등 섬 식수난 해소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지역 추가

안마도, 보길도 등이 올해부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원 대상 섬 지역으로 추가돼 지하수 확보시설이 확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